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서러운 국가유공자

광주보훈병원 진료 공백에 참전 용사·유가족 등 불만 잇따라
전문의 12명 집단 퇴사 뒤 충원 안돼 호흡기내과 등 이용 불편
"상주 의사 부족해서 외부병원 전원 등 진료 차질" 국민청원도

보훈병원을 찾는 국가유공자들이 열악한 보훈병원 진료 실태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광복 80년에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소홀한 처우에 대한 서운함도 묻어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모씨는 '광주보훈병원 의사 충원에 관한 청원'을 국회전자청원에 올리고 "보훈병원 진료과의 절반 이상에 상주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에 116명의 동의를 받았고 관련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청원 내용의 핵심은 광주와 전남·북 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 진료과에 상주 의사가 부족해 아픈 환자들이 복잡한 전원 절차를 거쳐 외부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령의 유공자들의 경우 자식 등 보호자가 없을 경우 홀로 병원 전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들을 고려하면 직접 원거리를 이동해 진료받는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게 청원인을 비롯한 유공자·보호자들 주장이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A(76)씨는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지역 국가유공자가 모두 광주보훈병원 하나만 이용하는데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아 병원 가는 날은 꼬박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광주보훈병원의 인력난은 고질적 문제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전문의 12명이 집단 퇴사한 이후 충원도 쉽지 않았다.

현재 의사직 정원은 72명으로 75명(전문의 66명·일반의 9명)이 근무중이지만 코로나 이후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타 병원 소속의 초청의가 주 2회 진료를 보는 등 운영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광주보훈병원은 의사직 정·현원의 경우 2020년 66명(정원 66명), 2021년 65명(66명), 2022년 56명(72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진료인원은 2020년 2분기 32만9000여명, 2021년 32만8000여명, 2022년 28만명, 2023년 28만2000여명, 2024년 30만1000여명, 올해 2분기 30만3000여명으로 꾸준히 늘어 진료 지연은 일상화된 상태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보훈병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국가보훈의료 주요계획'을 발표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광주보훈병원 관계자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병원 인력 확보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의사직 채용 공고를 내고 인맥, 전문직 커뮤니티를 동원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침수를 막아라 오락가락 비가 내린 11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뒤 지하 비품창고 입구에 집중호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설치한 모래주머니가 쌓여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위안부 모집 중' 소문냈다고 처벌…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영암군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알린 주민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역 주민들이 처벌받은 사실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게 영암군 설명이다.

판결문은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이 1938년 10월 7일과 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내용이다.

15세인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한 어머니가 처벌받았다.

10월 7일 판결문을 보면 영암 덕진면에 살았던 송명심 씨는 1938년 8월 8일 영막동 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뒤인 8월 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기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영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 27일 판결에서는 이운선 씨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 씨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양과동 SRF 인근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야"

정진욱 민주당 의원 "민관 TF 구성해 관리 필요"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의 악취 문제<광주일보 8월 7일 6면>와 관련, 연료화시설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됐다.

해당 SRF 시설이 오는 2031년까지 가동하는 점을 들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투명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의원은 11일 광주시와 남구가 SRF시설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즉각 이행할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SRF시설 주변 '악취관리지역' 지정 ▲민·관·전문가 참여하는 '민관합동TF' 구성 ▲악취저감시설 성능 검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악취 측정 결과와 대책 마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더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광주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하고, 모든 절차와 대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방관 불 끄려 문 부수면 보상 책임 없다?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 마련…보상 기준·절차 담아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또 손실 발생의 원인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어야 하며 같은 사유로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도 청구인에게 원인 책임이 있어 보상이 기각됐다.

원인 책임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 손실을 본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 손실 규모,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한다.

지침서는 손실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